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23
----------	------

제출연월일 : 2021. 10. 2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 예산낭비, 책임회피성 용역 등 부실용역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용역의 정책반영율을 높이고,
-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단발성이 아닌 다양한 정책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 등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조항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 나. 조례의 체계화 및 명확화를 위한 장 신설
 - 제1장 총칙, 제2장 대구광역시용역심의회, 제3장 용역의관리
- 다. 용역심의회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4조)
 -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사항 점검 등 역할 확대
- 라.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안 제5조의2)
- 마. 용역 진행사항 점검 강화(안 제9조)
 - 용역 중간점검 결과 위원회 제출 의무화
- 바. 정책연구 윤리 강화 마련 신설(안 제9조의3)
 - 용역발주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용역완료시 자가점검표 제출
 - 용역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 제재처분
- 사. 용역평가 및 기능 확대(안 제10조)
- 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용역결과 공개 및 관리 신설(안 제11조의1)

자. 용역결과 활용사항 공개 의무화(안 제12조)

차. 용역 성과점검 및 결과관리 체계화(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0. ~ 9. 3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측량·시험을 제외한 계획·조사·자문·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타용역”이란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그 밖의 용역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를행정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를 삽입한다.

제3조 본문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려면”으로, “사전심의를 거쳐야”를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의 제목 “(위원의 제척·회피)”를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회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5(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의7(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경우 회의를”을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역 관리 및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련 분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제6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 편성 후 집행(계약, 입찰 공고 등)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제3장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용역과제의 선정) ① 용역을 시행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타기관에서 연구한 실적이나 자료 등과
의 유사·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6조의2(중전의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이상”을 “100분의 30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학술용역”을 “용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정책연구 윤리강화) ①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하여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평가 시 용역부정행위를 점검하여야 하고, 용역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제7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용역 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평가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을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에 관한”을 “용역”으로, “요구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로 한다.

제7조 다음에 “제3장 용역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9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시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점검”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점검결과”을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로,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중간점검 시 주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의 요구 및 수정 사항을 작성하여 용역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 등 시정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용역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결과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중전의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12조의2) 제2항 중 “용역발주부서”를 각각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항 중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중전의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의”를 “시장은 용역의”로,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을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시 행정포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용역결과: 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2. 용역평가 결과: 평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3. 용역 활용상황: 평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제11조의2(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용역결과의 공개 및 관리) ①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공개여부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용역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과「○○○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변조·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과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용역윤리 자가점검표

구 분		체크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반적 사항	①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내용을 인지하였다.		
	②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위조	①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가 있다.		
변조	②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가 있다.		
표절	③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있다.		
	④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⑥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복 게재	⑦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있다.		
	⑧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⑨	출처를 표시하였어도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		
부당한 저자 표시	⑩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⑪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p>본인은 본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p> <p style="text-align: right;">용역수행기관 책임자 (서명)</p>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간/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개월)		
활용구분	1. <input type="checkbox"/>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2. <input type="checkbox"/> 정책참고 3. <input type="checkbox"/> 조사분석 4. <input type="checkbox"/> 통계/DB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 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학술용역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측량·시험을 제외한 계획·조사·자문·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	3. “기타용역”이란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그 밖의 용역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회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신 설>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대구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 등 4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하여 시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려면 --

-----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

. 다만-----

제4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

<신 설>

<신 설>

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신 설>

<신 설>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
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5(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의7(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분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임시회의-----
----- 경우에 -----
--.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

-----.

④ -----
----- 개의(開議)하고, -----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역 관리 및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용역 관리 및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0.
2.22 조례 제4126호)

<신 설>

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
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련
분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삭 제>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
용)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

제12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
역기간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
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
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

발 등 시정발전에 적극 활용하
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활용보고서
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용역과제담
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

----- 점검하고 그 점검결
과를 위원회에 제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중간점검
시 주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
의 요구 및 수정 사항을 작성하
여 용역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
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점검결과----- 게을리하
거나-----
----- 앓는다고 -----
----- 해당 -----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용역심의 대상) <신 설>

②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 3. (생략)

-----.

제8조(용역과제의 선정) ① 용역을 시행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타기관에서 연구한 실적이나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6조(용역심의 대상) ① 위원회의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
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
우. 단, 이 경우 예산 편성 후
집행(계약, 입찰 공고 등)전에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의2(재심의) 주관부서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는 심의회에 재심을 의뢰하여
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
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
4.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9조(용역의 중복 검토) ① 심의
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
우 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
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당해 기관에서 추

4. -----

--. <단서 삭제> -----

.
이 경우 예산 편성 후 집행(계
약, 입찰 공고 등) 전에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2(재심의) -----
-----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

1. 위원회-----

2. 용역-----

3. ----- 100
분의 30이상 --
4. 용역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다른 기
관이 현재 추진중인 용역과 중
복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정책연구 윤리강화) ①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 준
수 서약서를 사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
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
도 검사결과서와 별지 제2호서
식의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하여 용역
부정 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
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평
가 시 용역부정행위를 점검하여
야 하고, 용역부정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부정행위가 확
인될 경우 계약부서 및 주관부
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예산편성 등) ①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삭 제>

제11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시 행정포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용역결과: 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2. 용역평가 결과: 평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3. 용역 활용상황: 평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제7조(예산편성 등) ①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는 -----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의2(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국장,

② ----- 용역 -----
----- 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
-----.

제3장 용역의 관리

제13조(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결과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

-----.

② -----
----- 주관부서 -----

과장·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략)

제13조(용역의 평가) ① 시장은 시가 발주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 주무관-----

--. 이 경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용역의 평가) ① 주관부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있다.

<신 설>

<신 설>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
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용
역수행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
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의 주요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
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
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
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사·공단, 출자·출
연기관 용역결과의 공개 및 관
리) ①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제11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출
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
는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공개
여부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용역발주부터 용역준공시까지 체계를 정비하여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경현